
「2022-제2호(Vol. 20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2. 2. 28.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야별목차		
분야	제목	자료 출처
1. 경제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월 최근 경제동향 • 경제전망보고서(2022년 2월) • 국제유가상승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2021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및 2022년 전망 •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동향 및 특징(국제경제리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KDB미래전략연구소 한국은행
2. 재정 (4~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2021년(FY2020) 지방재정분석결과와 시사점 • 2022년 2월 재정동향 및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재정부
3. 예산·재정 관련법령 (6~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8~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 코로나19가 전 세계 부채에 미친 영향 •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 • 2022년 주요 산업·과학기술 정책과 강원도 대응 방안 	강원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강원연구원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1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 강화 • 행안부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자연재난 위험요소 사전 차단 • 2021회계연도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1. 경제

출처

■ 2022년 2월 최근 경제동향

기획재정부

- (최근 국내경제)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른 내수영향이 우려됨. 대외적으로는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확대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원자재·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됨. 이에 선제적 물가관리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점검·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기회복 뒷받침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임.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 광공업 생산, 소매판매, 건설투자는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 및 설비투자는 감소함.

(고용부분) 취업자 수가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실업률은 1.6%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함.

(금융시장 부분)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 확대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 및 환율은 상승함.

[바로가기](#)

■ 경제전망보고서(2022년 2월)

한국은행

-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2년 3.0%, 2023년 2.5% 수준을 나타낼 전망. 국내경제는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지속과 방역조치 완화 기조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점차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취업자수는 2022년 28만명, 2023년 20만명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2022년 3.1%, 2023년 2.0%의 상승률이 예상되며, 경상수지는 2022년 700억 달러, 2023년 68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

【 경제전망 】

구분(단위)	2021			2022			2023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4.0	4.0	4.0	2.8	3.1	3.0	2.5
취업자수(만명)	12	62	37	36	20	28	20
실업률(%)	4.5	2.9	3.7	3.8	3.3	3.6	3.7
고용률(%)	59.8	61.2	60.5	60.1	61.1	60.6	60.7
소비자물가(%)	2.0	3.0	2.5	3.5	2.7	3.1	2.0
경상수지(억달러)	418	465	883	280	420	700	680

[바로가기](#)

1. 경제

출처

■ 국제유가상승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최근 국제유가 동향) 국제유가는 사상 세 번째 배럴당 100달러 고유가 시대로의 진입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음.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되면 원유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유 공급 측면에서 OPEC의 추가 증산 가능성이 높지 않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이 큼.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의 대체제인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제유가는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변수		국제유가 연평균 100달러 시나리오	국제유가 연평균 120달러 시나리오
성 장	경제성장률	0.3%p ▼	0.4%p ▼
안 정	소비자물가상승률	1.1%p ▲	1.4%p ▲
대외신인도	경상수지	305억 달러 ▼	516억 달러 ▼

○ 국제유가 상승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을 위해 소비되는 한국 원유의존도가 훨씬 높은것으로 분석되어 국제유가 상승시 상대적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크게 작용함으로써 가격경쟁력 하락과 이윤 감소의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OECD 회원국 중 국민1인당 원유소비량 4위를 기록하며 주요 산업들의 비용 상승 압력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오일쇼크의 충격을 극복하여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벗어나야 함. 이에 따라,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기업 수익성 악화를 대비한 비상경영 체제 구축과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원자재 구매 효율성 확보 노력이 요구됨.

[바로가기](#)

■ 2021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및 2022년 전망

KDB미래전략 연구소

- (2021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2021년에는 기업의 체감 자금사정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규모(1~11월 증감액 기준)는 173.3조원으로 전년동기 170.6조원 대비 2.7조원 증가함. 이 중 간접금융규모는 92.1조원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대기업의 선제적인 자금확보 수요가 점차 축소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20.9조원 감소함. 직접금융규모는 81.2조원으로, 회사채순발행 및 주식 발행 규모가 모두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23.6조원 증가함.
- (2022년 기업금융시장 전망) 국내경제는 경제활동의 점진적 정상화, 정부의 경기부양 등에 힘입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①건조한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정책·규제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②기업들의 자금수요는 지속되나,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대출자산부실화가 우려됨.
- (2022년 간접금융시장 및 직접금융시장 전망) 간접금융의 경우 '20~'21년 수준보다 대출 규모는 감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경제회복 기대감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금융시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대규모 기업공개 계획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을 지속할 전망이다.

※ 직접금융시장 : 기업이 회사채나 주식 발행 형태로 시장에서 직접 자금 확보,
간접금융시장 : 직접금융의 대립되는 개념으로 은행권 등을 통해 기업대출 형태로 자금 확보

[바로가기](#)

■ (국제경제리뷰)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동향 및 특징

한국은행

- (개요) 국제적인 탄소중립 정책,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과 공급망에 큰 변화와 매년 큰 폭의 성장세가 지속될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구조적 변화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자 함.
- (글로벌 시장 동향)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은 그동안 탄소배출 관련 규제와 각국의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높은 성장세가 지속됨.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이 크게 증가되어 전기차 전문업체의 위상이 강화됨. 전기를 비롯한 친환경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과 맞물려 2020~30년 중 연평균 약 22.3% 증가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친환경차 시장의 주요 특징) 자동차산업의 경쟁 요소가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부각되고,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수가 적고 핵심부품 외주화가 가능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지므로 고용이 감소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포함해 핵심부품에 대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음.
- (평가) 운송수단의 전동화(e-mobility)는 내연기관에 의해 주도되어 온 기존 자동차산업의 경쟁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 내연기관차 생산우위가 있는 독일과 일본은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우위를 새롭게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전환과정에서 배터리, 전장부품 등에 대한 수요확대는 우리나라의 ICT산업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그동안 자국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중국 전기차·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최근에는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정부는 1월 24일 국회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추경안의 1월 조기 제출은 1951년 이후 처음으로,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 증가분은 14조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에 한정되어 있음. 주요 내용은 ① 방역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11.5조원, ② 방역 상황 지속에 따른 중증환자 병상 추가 확보, 오미크론 확산 등에 대비한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등 방역 보강 1.5조원, ③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추가 확보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바로가기](#)

■ 2021년(FY2020) 지방재정분석결과와 시사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재정분석 제도 개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종합 분석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분야 13개 본지표 및 23개 참고지표로 세부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분석 결과는 국무회의 보고 및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함.
- (분석 결과)
 - 재정건전성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에 따른 적극재정 추진으로 적자전환되고 신규 채무발행 자제와 연차별 상환계획 등 채무관리 노력으로 관리채무비율 감소 추세
 - 재정효율성 : IT기술을 접목 지방세징수체계 도입 등 적극적 징수노력으로 6년 연속 지방세징수율 상승
 -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의 정책사업비 예산반영 비율은 100.16%로 양호하고 이·불용액비율도 감소
- (시사점)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유동부채비율 등의 유동성 지표가 큰폭으로 변동되었고 향후 재정상태 지속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하고 확대재정정책 기조 내에서 세출집행의 효율적 노력으로 징수관리, 경비관리, 이불용액비율 등 지표는 개선되었음. 또한, 경기변동이 큰 시기일수록 정부의 재정활동은 정교한 재정계획의 토대에서 출발하여 재정계획-세출집행-재정운영 결과의 선순환 과정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고 관행적으로 수행되는 보수적 세수추계와 부동산 가격에 따른 세원의존성 등의 세입구조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 및 세수추계 등의 계획 분야부터 체계적 활동의 변화가 필요함.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2022년 2월 재정동향 및 이슈

기획재정부

- (재정운용동향)

- ① 총수입 :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등으로 '21년 2차 추경(514.6조원) 대비 약 56조원 증가한 570조원 수준 전망. 주로 경기 회복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추경예산 대비 국세수입 9.5% 증가
- ② 총지출 :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방역대응, 고용강화를 위한 경기 뒷받침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 '20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잠정) 추정
- ③ 재정수지 : 국세·기금수입 등 총수입 증가로 통합수지는 '21년 2차 추경(△90.3조원)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원대 수준 전망
- ④ 국가채무 :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월말 기준 15.4조원(국고채 잔액 858.7조원)

- (주요 재정 이슈)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 제언]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재정의 구조적 대응방안 설계에 주목함.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 재정 투자 우선순위를 점검할 것을 제언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제상황과 재정수요에 상응하도록 편성하고, 지자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초중등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재정 구조를 고등교육 분야로 재구조화하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해야함. 코로나19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어느때보다도 위협적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나라 교육재정 투자 전환의 시기를 늦출 수 없음.

[디지털전환 시대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의 등장과 재정 지원 방향]

현재 메타버스는 정보통신산업의 영역을 넘어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거의 전분야 이슈를 망라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성이 있고 상용화가 가능한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를 실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2021.5월 민·관 합동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여러 실증 기획(안)이 도출되었음. 메타버스 서비스를 육성하고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기 경쟁력의 핵심 부품개발과 기술개발이 필수적이고, 인문·사회·ICT융합이라는 복합적 기술환경을 이해하고 창작·창업등의 경제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하며, 탈중양화를 골자로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고령화에 대응한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추진동향과 시사점]

급속한 고령화, 가족 돌봄 감소 및 자립 환경 부족 등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정책적 관심이나 투자는 부족한 실정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점을 고려해보면 글로벌 고령친화 산업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인의 건강한 자립생활과 효율적인 재할, 돌봄을 위한 최적화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가 더욱 필요함.

[4차 산업혁명시대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2년 디지털 헬스케어 재정투자 전략]

- 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②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 확산 ③ 건강정보를 기반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④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개정 '21.12.28. 시행 '22.2.18.)

법제처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6cc62f861fdd6e50510c0224a756dff_img.jpg\) 바로가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2.2.15. 시행 '22.2.15.)

법제처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가중처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의 명단을 공개할 때 포함하여 공개할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고,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과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조세정책의 평가·연구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f95dab70c751fda7d824b8b03650f7aa_img.jpg\)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 '22.2.15. 시행 '22.2.15.)

법제처

-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득이한 공제 사유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2.2.15. 시행 '22.2.15.)

법제처

-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2.2.15. 시행 '22.2.15.)

법제처

-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항행선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판매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그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횟수별로 정하고,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과태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접경지역 지원 법·제도 개선 방안

강원연구원

- **(논의 배경)** 강원도 접경지역은 지난 20여년 동안 인구소멸위기, 취약한 재정자립도, 산업 구조의 불균형, 국방개혁으로 인한 부대 이전 및 병력 감축 등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근 감염병 증대, 군납 조달방식의 전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국에도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 등 시대적 흐름과 새로운 발전노선에서 소외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에 정부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률을 재·개정하고 제도를 수립해 왔으나 실효성은 제한적임.
- **(현행 법·제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간 연계·협력 증진을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나 특별법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국토기본법 등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으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법률 소관 주체가 다양해 부처간 합의 도출도 쉽지 않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수도권 비중이 증가하고 특수상황지역개발 예산도 도서지역에 집중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개선방안)** ①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②지역여건 반영이 아닌 지역여건이 부재한 상황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촉구 ③특수상황지역의 범위와 국고 보조율의 조정 요청 ④접경지역·DMZ 특별연합의 출범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새롭게 추진 중인 접경지역 지원 법·제도가 기존의 법·제도와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로가기](#)

■ 코로나19가 전 세계 부채에 미친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 최근 세계은행은 코로나19가 전 세계 부채 확대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코로나 위기로 축적된 전 세계적 부채의 급증 현상 및 위험성을 지난 5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적으로 제시함.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민간 및 공공부채의 급증을 ‘제4의 부채물결’로 정의하였고 지난 10여 년간 부채의 축적과정에서 신흥국의 부채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고 크게 증가하였는데 복잡해진 채권자의 구성, 글로벌 저금리, 다수의 정책 개입, 단기간 부채 급증 자체로 앞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고, 금번 제4의 부채물결 이후에 경제회복을 위한 상당한 투자수요 등을 고려해 보면 부채 수준은 가까운 미래에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결론적으로 과거 부채의 축적과정 이후 대규모 금융위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번 제4의 부채물결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증한 부채 수준과 악화된 취약성에 적합한 조치가 빠른 시일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함.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중장기 재정건정성 유지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개요) 고령화와 저성장, 소득양극화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코로나 19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이 적극화되고 재정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재정위험을 평가하고 중장기 재정 유지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 10년마다 3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는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 보고서는 국가채무 증가가 초래하는 재정위험에 대해 평가한 후,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추가적인 부채 확대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가설과 저금리-부채 확대론의 문제를 지적함.

(결론) 중장기 재정위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채무상한제 재정준칙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정성 유지를 정부의 법적 의무로 만드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함. 특히 지출감축과 세입확충에 의해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적 노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임.

[바로가기](#)

■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들어가며) 우리나라 최근 연도별 법인 자동차 신규 등록이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과 운영비용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혜택의 절세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으로 고가 차량 구매 형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유럽 주요국의 과세방식과 세제정책)

유럽의 업무용 승용차는 신차 판매의 50% 이상으로 구입이 일상화되어 있고 OECD회원국의 업무용 차량의 개인적 혜택에 대한 과세방식을 조사한 Harding(2014)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은 차량가격을 기준 과세 방식을 산정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음. 영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과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르는 이유는 ‘2050년 탄소중립’ 실행방안 중 하나인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를 2030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친환경 차량으로의 수요를 유도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임. 또한, 사적 사용에 대한 추가과세를 통해 상당한 조세수입을 거두었으며, 법인으로부터 국민보험 기여금도 징수하였음.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사적 사용을 완전히 막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시사점) 법인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적인 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신 영국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개인소득에 연동한 현물급여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탄소중립 정책의 흐름과 변화에 맞춘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해야함.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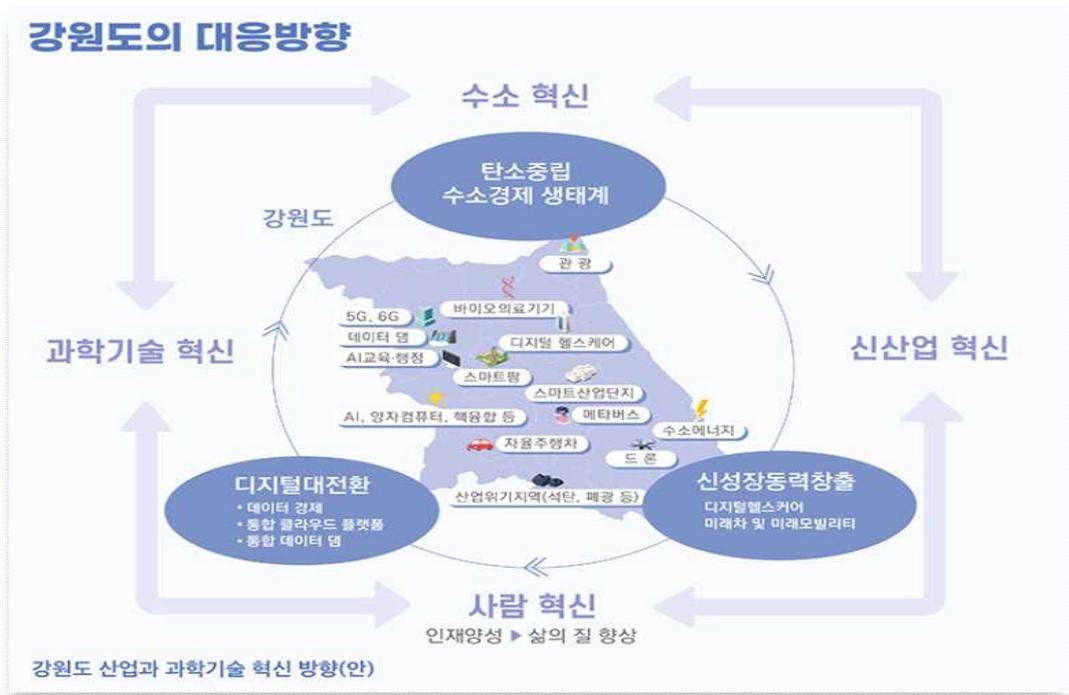
4. 정책 및 연구

출처

■ 2022년 주요 산업·과학기술 정책과 강원도 대응 방안

강원연구원

- (개요) 2022년 정부가 탄소중립과 뉴딜분야 대전환 기틀 마련,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 디지털 대전환, 신산업·신기술 육성 정책의 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강원도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파악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전략이 요구됨.
- (대응방안)
 -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지원** ▶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등을 통한 미래차 부품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청정수소 제조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강원형 수소 산업을 육성
 - 에너지 탄소중립 거점 지역화** ▶ 동해안 지역을 글로벌 수소산업 거점화지역으로 육성
 - 국가산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창출**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위치 및 역할을 검토하고 강원도 차원의 분야별 맞춤형 육성 로드맵 마련 (바이오헬스, 미래형 모빌리티 등 성장동력의 지속 확충과 내실화)
 - 디지털 플랫폼 도시 강원 추진** ▶ 도 및 18개 시군 지방정부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으로 행정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선도하여 데이터를 상호 연계·분석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강원 데이터댐 구축하고 강원도 특화 메타버스 클러스터를 통해 스마트관광 신산업 창출
 - 디지털 중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도내 대학의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정부의 창업중심대학 선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데이터 중심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지원 시스템을 구축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

-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2조원, 총세출은 496.9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3조원이며, 이월액 4.0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3.3조원을 기록함.
 - ① 총세입은 524.2조원 징수, 전년 대비 58.7조원 증가, 예산대비 17.5조원 증가
 - ② 총세출은 예산현액 509.2조원 중 496.9조원 집행(97.6%), 전년 대비 43.1조원 증가
 - ③ 이월은 4.0조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증가
 - ④ 세계잉여금은 23.3조원으로 일반회계 18.0조원, 특별회계 5.3조원임
 - ⑤ 불용은 8.4조원으로 전년(6.6조원) 대비 1.8조원 증가

[바로가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 주요 내용

규모 (정부안) 14.0조원 → (국회확정) 16.9조원 (2.9조원 증)

주요 증감 내역	정부안	국회 확정	증 감
①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11.5조원	13.5조원	+2.0
소상공인 지원	11.5	12.8	+1.3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	0.7	+0.7
② 방역 지원	1.5조원	2.8조원	+1.3
③ 예비비	1.0조원	0.6조원	△0.4

재원은 국민부담 최소화를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충당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 특히,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

[바로가기](#)

■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2년은 7,500억)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할 예정임.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

- 정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 혜택을 지속한다고 밝힘.
-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은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임.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 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됨.

[바로가기](#)

■ 행안부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자연재난 위험요소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

- 정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16.4% 증액된 1조3,746억원(국비6,873억, 지방비6,873억)을 투자한다고 밝힘. 재해예방 사업별로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검증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자치단체에 배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재해위험 요인 사전 차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바로가기](#)

■ 2021회계연도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 (현황 및 문제점) 세수 추계치는 경제지표 전망치를 추계모형에 대입하여 산출하는데 경제지표·세수 급변 시기에 추계모형의 정합성 저하되는 문제와 기존 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함. 또한 세수급등락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추경외 별도의 세수전망 수정계기가 없음. 세제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는 실시하나 세수추계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오차원인 분석·환류시스템이 불충분함.
- (4단계 개편 방안)
 - ① [모형] 추계모형 정합성 강화 ▶ 경제분야별 자문기관 다양화 및 회귀모형 보완을 위한 추세선 분석 도입
 - ② [절차] 의사결정 투명성·합의성 제고 ▶ 세추추계위원회 신설하여 외부전문가 검증 강화
 - ③ [점검] 이상징후 대응체계 구축 ▶ 세수급등락 이상징후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④ [평가] 사후평가·피드백 내실화 ▶ 성과평과 Pass/Fail 시스템 도입 및 환류시스템 강화

[바로가기](#)